

“구매·이용·교체 지원”…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기아가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기차 구매부터 이용, 교체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부담을 낮춰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부터 기존 보유 고객까지 전기차의 구매·이용·교체 전 주기에 걸쳐 체계 혜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전기차 구매 시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0%대 초저금리 할부와 전기보장 유예형 할부를 대폭 강화한다.

EV3·EV4를 M할부 일반형(원리금균등 상환)으로 구매할 경우 48개월 0.8%, 60개월 1.1%의 금리가 적용된다. M할부 일 반형 정상금리 대비 각각 최대 3.3%p인 하된 수준이다. EV4 롱레인지 어스를 선수율 40%, 60개월로 구매 시 이자 부담만

약 26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 EV3·EV4를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로 이용하면 M할부 유예형 정상금리 대비 2.7%p 낮은 1.9% 금리가 적용되며(36개월 기준), 차량가의 최대 60%를 만기까지 유예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전액 면제돼 고객은 언제든 잔여 원금을 상환하고 할부를 종료할 수 있다.

특히 기아는 전기차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EV5·EV6의 가격을 조정한다.

이날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EV5 스탠다드 모델은 3400만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V5 스탠다드 모델은 60.3kWh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최고 출력 115kW, 최대토크 295Nm를 발휘한다. 전비는 약 5.1kWh/km,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8인치 기준 약 335km다.

가격은 어에 4310만원, 어스 4699만원,

금융·상품·서비스·잔존가치 전 과정에 고객 혜택

EV5·6 가격 300만원 인하…배터리·정비인력 강화



GT라인 4813만원이며, 고객 인도는 3분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에 등재돼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때 지급되는 전환지원금까지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 어에 3728만원, 어스 4103만원, GT라인 4213만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EV5 롱레인지 모델 가격을 280만원

내린다.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개별소비세 3.5% 기준 어에 4575만원, 어스 4950만원, GT라인 5060만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전환지원금까지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 어에 3728만원, 어스 4103만원, GT라인 4213만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EV6도 300만원 조정해 고객 혜택을 늘린다. 스탠다드 모델 라이트 4360만원, 에

어 4840만원, 어스 5240만원, 롱레인지 모델 라이트 4760만원, 어에 5240만원, 어스 5640만원, GT라인 5700만원으로 내린다. EV6 GT 모델은 7199만원(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비대상)이다.

전기차 이용 편의성과 정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750여 개 오토클럽을 통해 정비 서비스에 대한 고객 편의를 꾀넓게 제공하며, 향후 모든 서비스 거점을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 'KEVT PRO'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기아는 전기차 총소유비용(TCO)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전압 배터리의 부분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교체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증종고차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기아는 고객이 중고 전기차를 더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5개 등급 체계의 '중고 EV 종합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배터리 성능과 상태 등 핵심 품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재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보유한 차량을 기아 인증종고차에 판매한 뒤 기아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신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타보고 싶은 전기차, 한번 경험하면 계속 찾게 되는 전기차가 될 수 있도록 가격·금융·서비스·잔존가치까지 전 분야에서 고객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 전기차 대중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참석자 50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중소기업 중심 지방 주도 성장, 호남서 시작”

중기중앙회, 호남권 신년인사회…사랑나눔 콘서트도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열리는데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례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

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와 지자체

여로 선정한 '자강불식'을 소개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의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에 이어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는 '중소기업 사랑나눔 콘서트'가 펼쳐졌다. 이날 콘서트는 호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0여명을 초청해 중소기업계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예술을 통한 휴식과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자리로 치러졌다.

송대웅 기자

HD현대삼호, 지역 고령자 상생경영 ‘앞장’

어르신 고용 한식뷔페 개소…이동세탁 차량 구입비도

HD현대삼호가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및 복지 지원에 적극 나서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HD현대삼호는 22일 영암군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김재우 현대삼호 사장을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 장영범 영암시니어클럽 관장, 김미

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he 기찬밥상 Premium 개소식'을 열었다.

'The 기찬밥상 Premium'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영암시니어클럽이 사회적협동조합 정성그린을 통해 다수의 고령자를 고

용, 운영하는 한식뷔페이다.

HD현대삼호는 앞으로 5년간 2억원 상당의 사업장 입대료를 무상 지원한다.

개소식에 이어 '찾아가는 기(氣) 찬빨래방' 차량 전달식도 진행됐다.

'찾아가는 기(氣) 찬빨래방'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이동세탁 차량이 직접 방문, 무료 세탁 및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상의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을”

정부 등 건의문 전달…임대사업자 부담·유동성 위기 초래 지적

광주상의회의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편된 제도가 보증 사고율이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 현장에서는 과도한 자금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상의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HUG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개편안의 감정평가 방식이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제도는 HUG가 지정한 소수의

면, 건설임대사업자는 1% 미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 금액 하락에 따른 부작용은 임대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입자 역시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누적돼 오히려 보증 사고 확대라는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 발생 구조와 실제 보증 사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

설임대사업자를 현행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제도를 시행 이전인 지난해 6월 전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단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

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